

한국의 반빈곤운동

-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 쪽방지역과 용산정비창 개발 대응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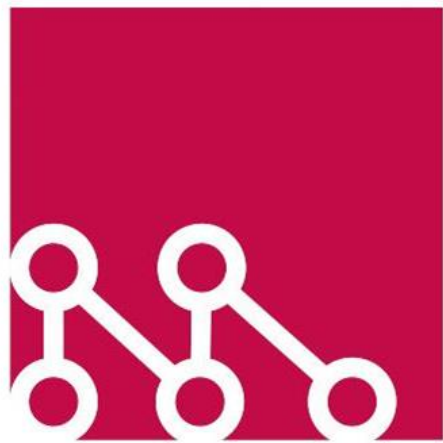
韓国の反貧困運動

- 社会保障制度の問題点と公共扶助(基礎生活保障制度)
- チョッパン(小部屋住居)地域とヨンサン車両整備場の開発対応を中心に、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貧困社会連帯
チョンソンチョル

빈곤사회연대는?

- 2001년 최옥란열사의 최저생계비현실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 이후 꾸려진 기초법 개정 연석회의를 모태로 2004년 설립.
- 빈곤을 착취와 경쟁이 심화된 사회의 결과로 보고, 일시적인 구호활동이나 원조가 아니라 빈곤을 발생시키는 사회구조를 바꿀 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가난한 이들의 권리선언과 연대가 빈곤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갈 것. '반빈곤 사회운동'으로 빈곤 철폐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모색하고자 함
-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장애인 등 빈곤 당사자와 사회복지 노동자, 취지에 동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한 빈곤정책 제도개선, 강제퇴거 금지, 도시의 고급화와 개발정책에 따른 빈민의 퇴거에 반대하며 가난한 이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꾸리고자 함.



빈곤사회연대

Korean People's Solidarity
against Poverty

貧困社会連帯とは？

-2001年、崔玉蘭（チェ・オクラン）さんの最低生計費を現実的なものにするための明洞聖堂での座り込み闘争後に構成された基礎法改正円卓会議を母体に04年設立。

-貧困を搾取と競争が激化した社会の結果と見て、一時的な救護活動や援助でなく貧困を発生させる社会構造を変える時に解決できると見る。

-貧しい人々の権利宣言と連帯が貧困解決の端緒を作っていく。「反貧困社会運動」で貧困撤廃のための社会的連帯を模索。

-露店商、撤去民、ホームレス、障がい者など貧困当事者と社会福祉労働者、趣旨に同意する労働社会団体が参加。

-基礎生活保障制度の扶養義務者基準の廃止をはじめとする貧困政策制度の改善、強制退去の禁止、都市の高級化と開発政策による貧民の退去に反対し、貧しい人々も共に生きていける権利を獲得する。



빈곤사회연대

Korean People's Solidarity
against Pov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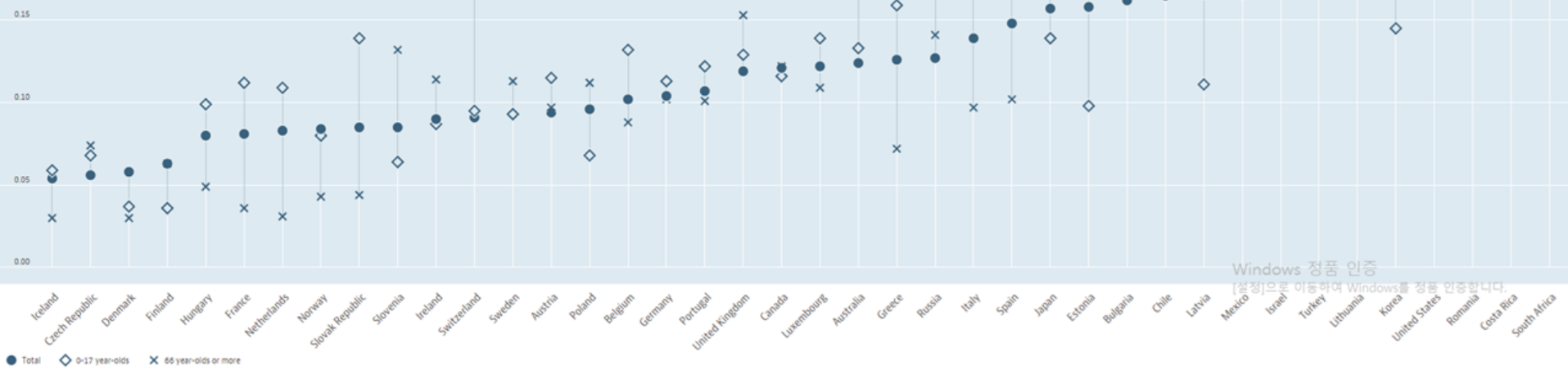
한국의 빈곤현황과 불평등의 구조

韓国の貧困の現況と不平等の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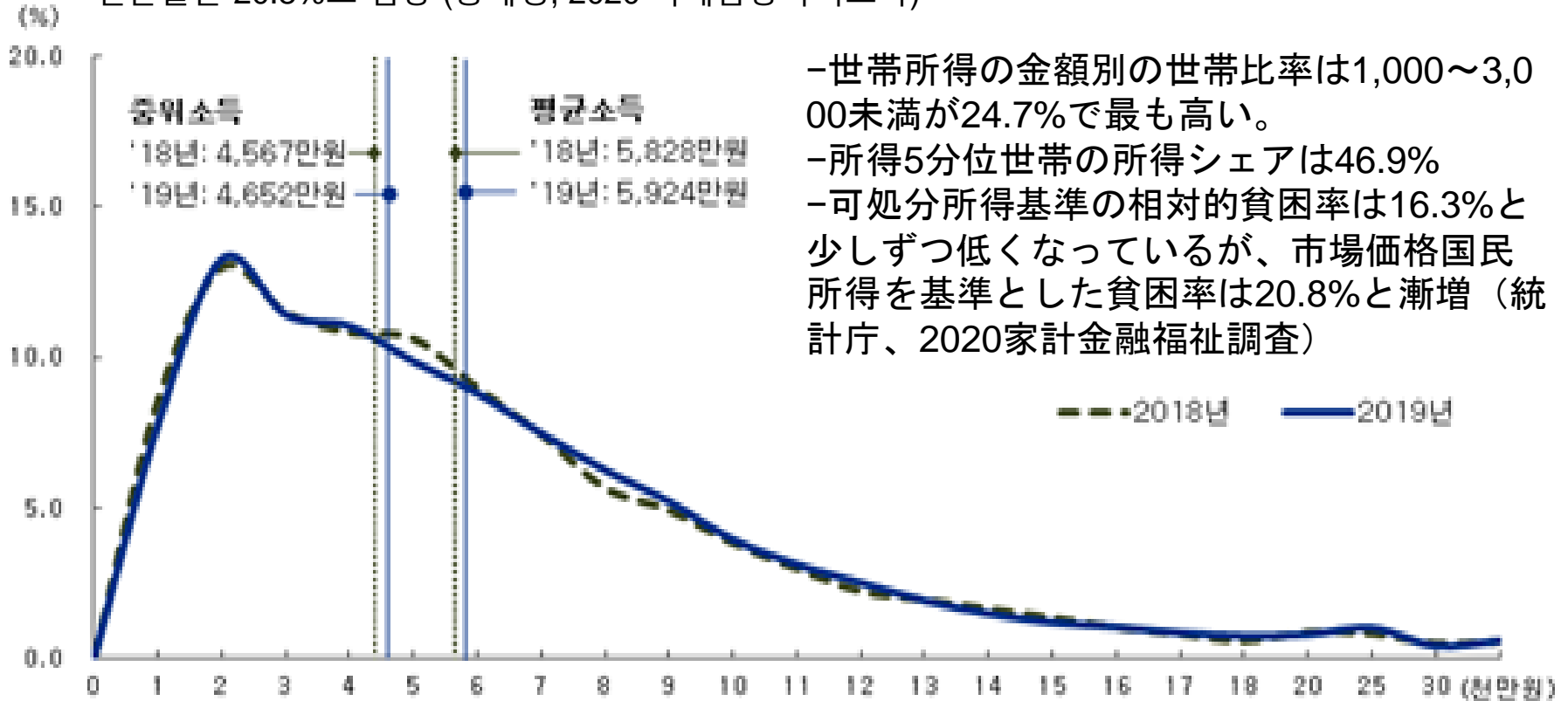
- 세계적인 기준에서 한국은 GDP 12위로 높은 소득수준을 가진 나라. 그러나 노인 빈곤율은 50%에 육박하고, 자살률도 10만명당 25명으로 매우 높음. 사회복지지출은 OECD평균의 절반에 불과함.
- 높은 노인 빈곤율, 장애인 빈곤율을 보듯 노동소득이 사라졌을 때 자산이 적은 사람은 빈곤을 피하기 어려운 사회

韓国はGDPが12位と高いが老人の貧困率は50%に近く、自殺率も10万人あたり25名と高い。社会福祉支出もOECD平均の半分に過ぎない

高い老人貧困率、障がい者の貧困率を見てもわかるように労働所得が無くなる時、資産が少ない人は貧困を免れることが困難



-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비율은 1,000~3,000만원 미만인 24.7%로 가장 높음.
-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46.9%
-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6.3%로 조금씩 낮아지는 추이이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20.8%로 점증 (통계청,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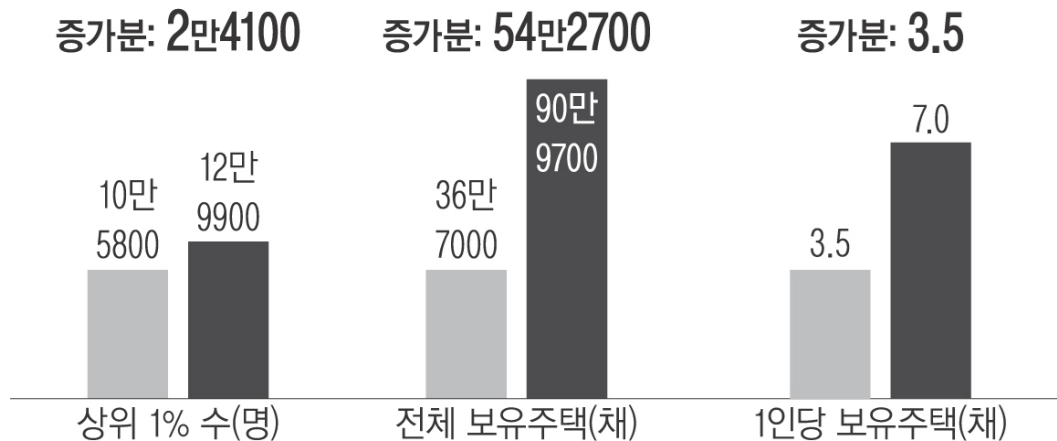
- 世帯所得の金額別の世帯比率は1,000~3,000未満が24.7%で最も高い。
- 所得5分位世帯の所得シェアは46.9%
- 可処分所得基準の相対的貧困率は16.3%と少しずつ低くなっているが、市場価格国民所得を基準とした貧困率は20.8%と漸増 (統計庁、2020家計金融福祉調査)

純資産10分位 別 순자산 10분위별(1)	2020	
	평균 순자산 平均純資産	점유율 (%) 占有率
전체	36,287	100.0
순자산 1분위	-1,212	-0.3
순자산 2분위	2,562	0.7
순자산 3분위	6,534	1.8
순자산 4분위	11,448	3.2
순자산 5분위	17,151	4.7
순자산 6분위	23,833	6.6
순자산 7분위	32,601	9.0
순자산 8분위	44,939	12.4
순자산 9분위	66,343	18.3
순자산 10분위	158,610	43.7

- 2020년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은 43.7%, 9분위와 10분위를 합한 상위 20%의 자산점유율은 62%
- 상위 자산가의 전체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가아파트 주택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
- 2020年上位10%の資産シェアは43.7%、9分位と10分位を合わせた上位20%の資産シェアは62%
- 上位資産家の全体シェアは毎年増加しているが、ソウルを中心とした高価マンション住宅価格の上昇が主な原因となっている。

상위 1% 집부자들의 주택 보유량 변화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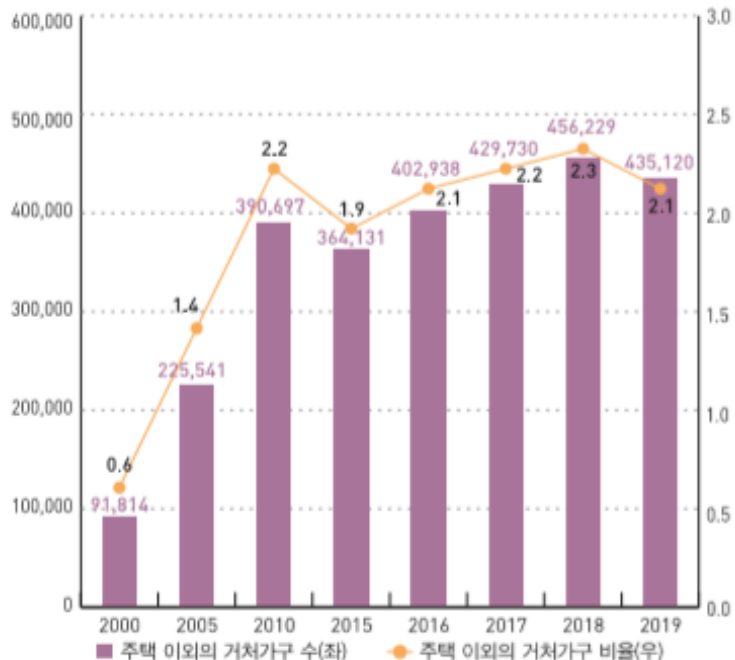
■ 2008년 ■ 2018년



- 상위 1%의 집부자들의 주택보유량이 증가할 동안 주택 이외의 거처(쪽방, 고시원, 옥탕 등)에 사는 가난한 이들의 수도 증가

그림 11-4 연도별 주택 이외 거처가구 규모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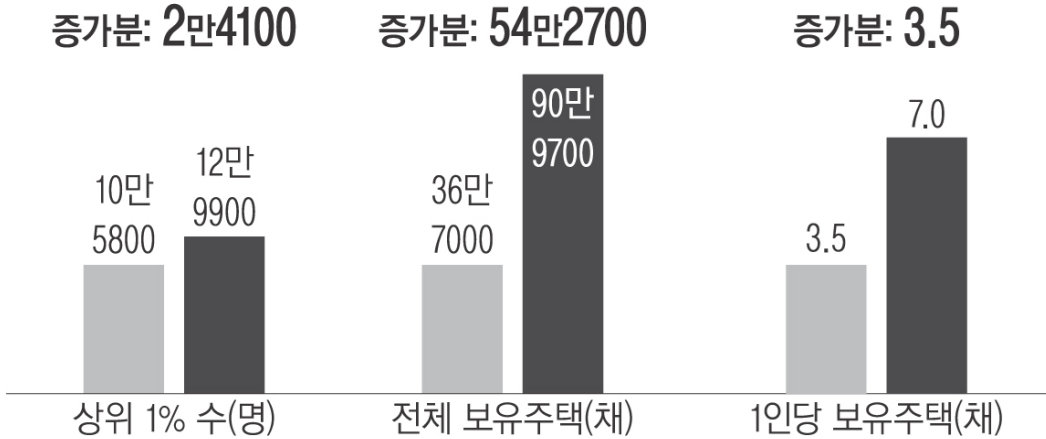
(단위: 가구, %)



上位 1% の住宅保有率の変化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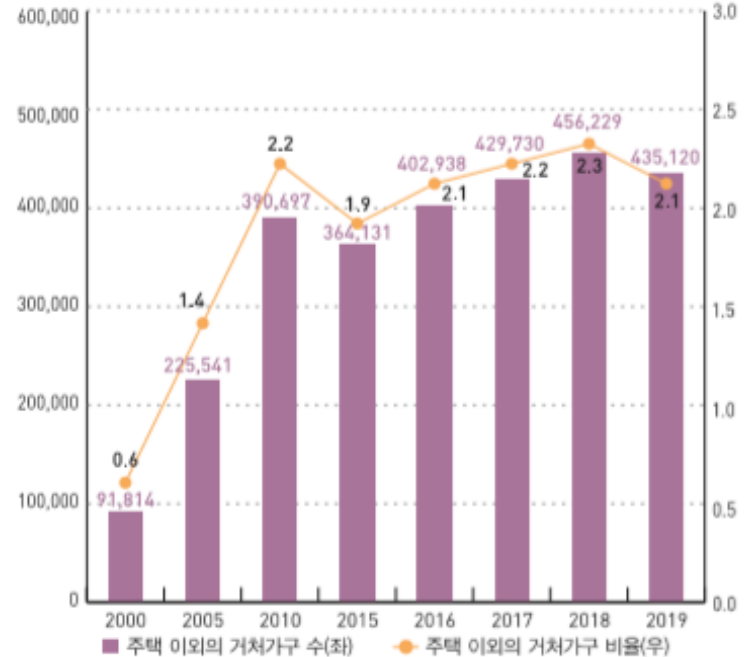
■ 2008년 ■ 2018년



- 上位1%の住宅保有量が増加する間、住宅以外の居住地(チョッパン、考試院、サウナなど)に住む貧しい人々の数も増加
- 考試院=元々は司法試験などの受験勉強用に作られた臨時の寝ることのできる自習施設、低額なため学生以外も使用)

그림 11-4 연도별 주택 이외 거처가구 규모 및 비율

(단위: 가구, %)



구분区分	15年		16年		17年		18年	
계合計	87만2천호 87万 2 千戸		94만8천호		103만5천호		112만2천호	
건설임대建設賃貸	644천호	73.8%	693	73.1%	747	72.2	784	69.9%
매입임대買入賃貸	100천호	11.5%	107	11.3%	115	11.1	129	11.5%
전세임대チョンセ 賃貸	128천호	14.7%	148	15.6%	173	16.7	209	18.6%

-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무척 중요함. 그러나 현재 공공임대주택 직접공급(건설, 매입)은 전체 주택의 약 6%에 불과. 저렴한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 매입하기보다 전세임대(금융지원)을 통해 공급하려는 정부의 정책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住居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公共が住宅を直接供給する公共賃貸住宅政策が非常に重要。しかし、現在、公共賃貸住宅の直接供給（建設、買入れ）は、全体住宅の約6%に過ぎない。安価な長期公共賃貸住宅を直接建設、購入するよりも、賃貸住宅（金融支援）を通じて供給しようとする政府の政策傾向が強まっている。

所得分位別の月平均の所得対比の住居費負担率 (RIR 2018年)

표 8. 소득 분위별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RIR, 2018년)

구분	임차 가구(2018년도 기준)				
	가처분소득 可処分所得	주거비(A) 住居費 (A)	RIR(A)	주거비(B)	RIR(B)
1분위	80	23	28.4	40	49.8
2분위	199	30	14.8	55	27.8
3분위	313	34	11.0	73	23.5
4분위	440	35	8.1	87	19.7
5분위	826	41	5.0	137	16.6
전체	328	32	9.7	73	22.2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출처 : 한국도시연구소, 2019

주 : A는 월 임차료와 주거유지비만 포함하고 보증금이 제외된 값이며. B는 보증금과 월 임차료, 주거유지비가 모두 포함된 값임(보증금 전환율 6% 적용하여 월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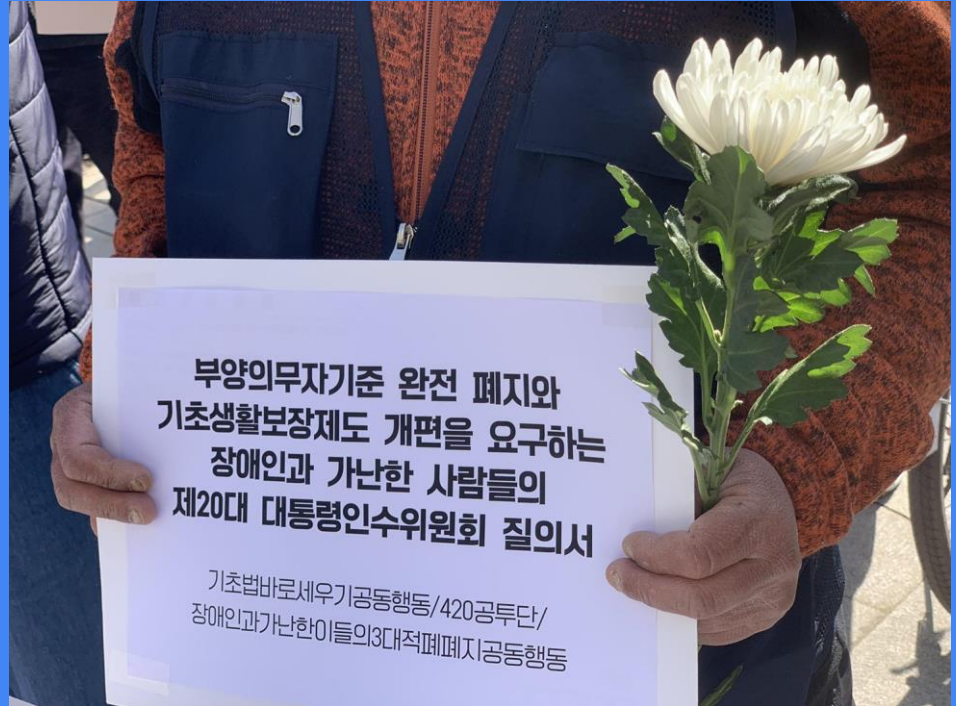
Aは月の家賃と住居維持費のみ、

Bは保証金と月家賃、住居維持費すべてを含めた金額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社会保障制度の
現況と問題点
- 公共扶助を 中心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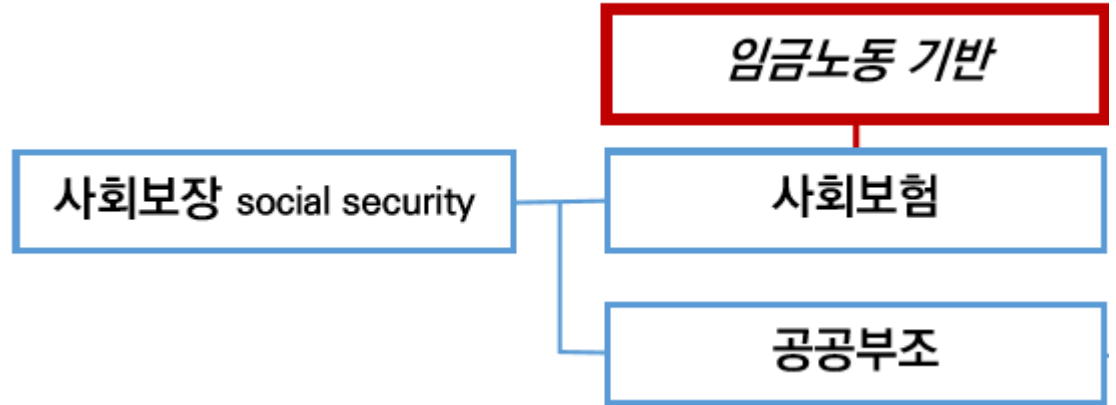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질의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420공투단/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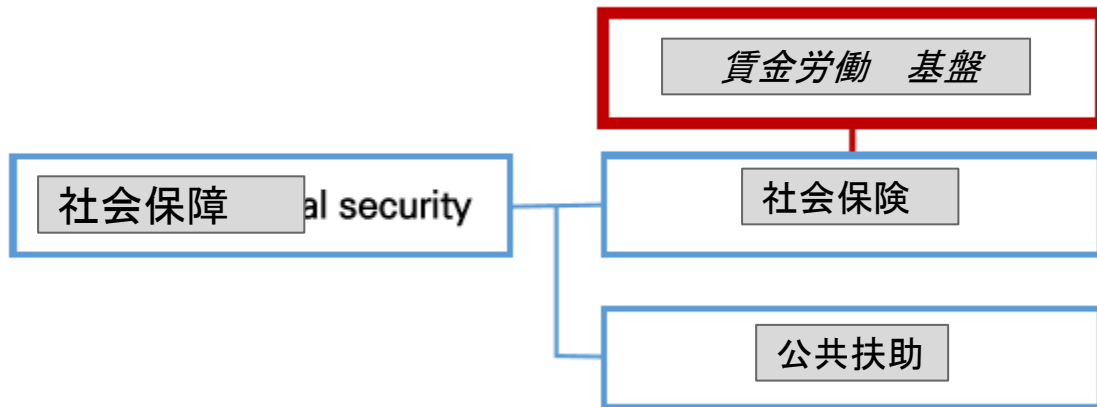
- **사회보장 (Social security)**는 일반적으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리고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 기초연금 등
- 사회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인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

韓国の社会保障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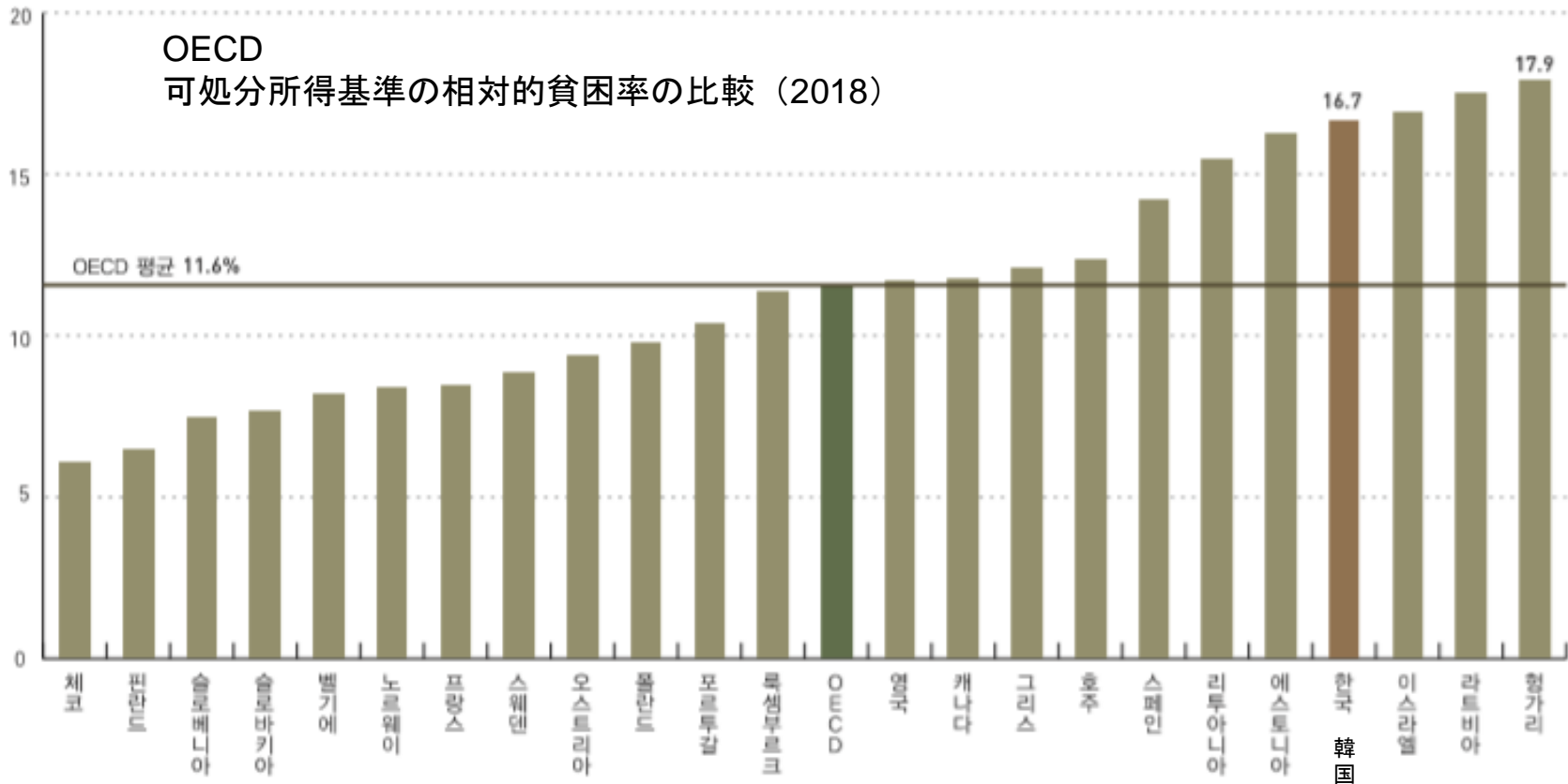
- 社会保障(Social security)は、一般的に疾病、障害、老齡、失業、死亡など社会的危険からすべての国民を保護し、貧困を解消し、国民生活を向上させるために提供する社会保険、公共扶助、社会サービス、そして生涯周期別社会セーフティネット
- 所得保障だけでなく、様々な社会的危険に対処する努力が増加していることから、社会サービスの比重が大きくなっている。



- 社会保険:国民年金、国民健康保険、雇用保険、労災保険、老人長期療養保険など
- 公共扶助:国民基礎生活保障、医療給与、緊急福祉、基礎年金など
- 社会サービス:障害者活動補助サービス、老人介護、家事介護サービスなど

그림 7-5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비교 (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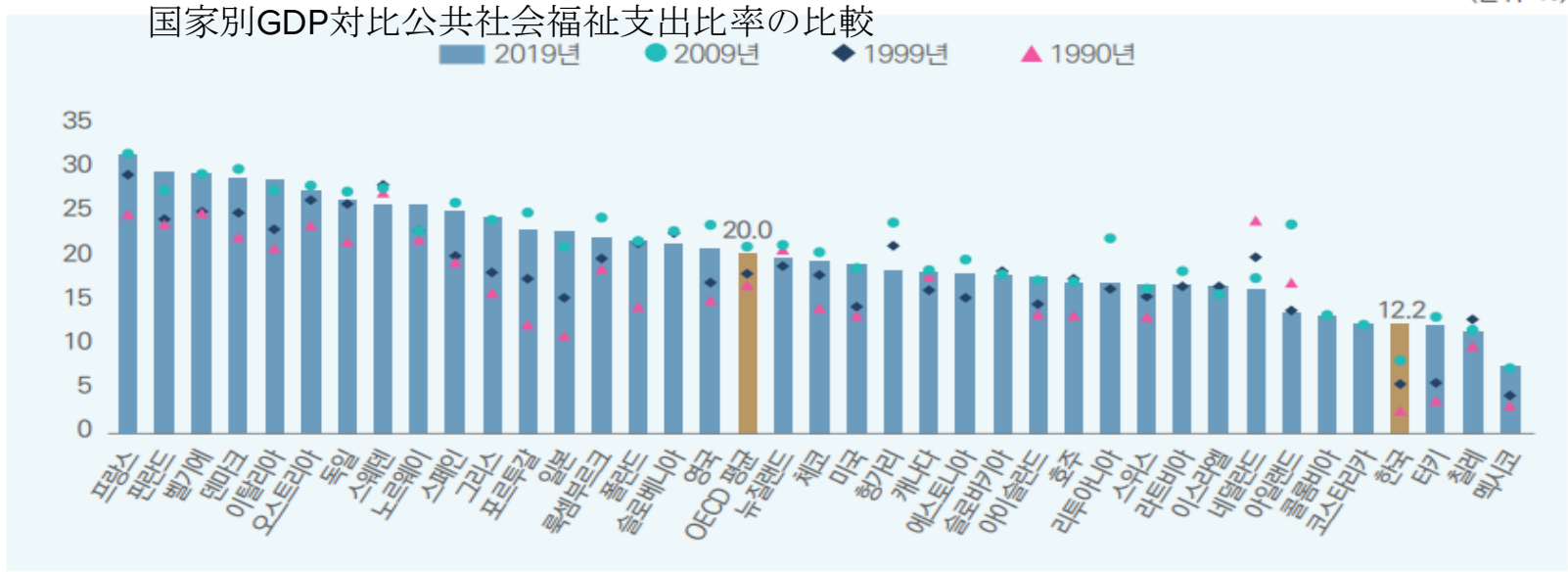
주: 1) 중위소득 50%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전을 받은 뒤, 국민 상위 50% 소득(중앙값)의 절반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2) 2018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만 포함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에서 2020.12.30. 인출)

[그림 1] 국가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비교

(단위: %)



- 주 1. 대부분의 국가들의 데이터가 가용한 시점인 1990년 자료부터 사용
 - 2. 호주, 일본은 2017년,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스위스, 코스타리카는 2018년 데이터
 - 3.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는 자료 부재로 2009년 대신 각각 2010년과 2011년 데이터 사용
 - 4. 2017년까지의 데이터는 확정치이며, 2018년과 2019년의 데이터는 잠정치임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注 1 大部分の国家のデータが始まった時期の1990年の資料から使用
 2 豪州、日本は2017年、カナダ、コロンビア、ニュージーランド、スイス、コスタリカは2018年のデータ
 3 コロンビアとコスタリカは資料の不在で2009年の代わりにそれぞれ2010年、2011年のデータを使用
 4 2017年までのデータは確定値で、2018年と2019年のデータは暫定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2021년 12월)

총 (중복제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2,363,256	1,485,635	1,433,325	2,163,011	310,840

- 한국의 빈곤율은 15% ~ 1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수는 인구대비 4.6%,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인구대비 3%에 불과함.
- 현재의 높은 빈곤율과 빈곤층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낮은 수급자 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옴
- 전체 수급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며, 2020년 12월 방배동에서 사망한지 5개월만에 발견된 김씨의 경우에도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였음.

基礎生活保障制度受給者の現状（2021年12月）

合計 (重複除外)	生計	医療	住居	教育
2,363,256	1,485,635	1,433,325	2,163,011	310,840

- 韓国の貧困率は15%~16%と高い水準を維持しているが、基礎生活保障制度受給者数は人口比4.6%、生計給与と医療給与受給者数は人口比3%に過ぎない。
- 現在の高い貧困率と貧困層をすべて包括できない低い受給者数は、基礎生活保障制度が施行されて以来、似たような水準で維持されている。
- 全受給者数が増加した理由は、2018年10月の住居給与から扶養義務者基準が廃止されたためであり、2020年12月に方背洞で死亡して5ヶ月後に発見された金氏の場合も住居給与だけを受け取る受給者であった。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사회 유력한 빈곤정책, 공공부조로 1999년 법 제정, 2000년 10월 시행됨
- 이전 공공부조인 생활보호법과 달리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해 보편적 빈곤정책으로 기능. 최저생계비 개념 도입으로 빈곤선을 상향하고, ‘권리’로서 보장함을 명시하여 사회권을 포함한 최초의 공공부조로 평가받음

헌법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4조 5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 최저생활을 보장”
(1조)

基礎生活保障制度の問題点

-
基礎生活保障制度は韓国社会の有力な貧困政策、公共扶助で1999年法制定、2000年10月施行された。

-
以前の公共扶助である生活保護法とは異なり、人口学的基準を廃止し、普遍的貧困政策として機能。

憲法 「生活能力のない国民は・・・国家の保護を受ける」
(34条5項)



国民起訴生活保障法 「生活が困難な人には必要な給与を実施・・・最低生活を保障」
(1条)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가구규모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주거급여 (중위소득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교육급여 (중위소득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 2015년 6월 맞춤형개별급여로 개편한 이후 기준중위소득을 급여별 선정기준에 사용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이하를 의미. 이에 비추어 봤을 때 급여별 선정기준이 너무 낮게 정해져 있음.

複雑でややこしい選定基準

世帯員数	1人世帯	2人世帯	3人世帯	4人世帯
中位所得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世帯規模区分	1人世帯	2人世帯	3人世帯	4人世帯
生計給付 (中位所得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医療給付 (中位所得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住居給付 (中位所得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教育給付 (中位所得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 2015年6月にオーダーメイド型個別給与に改編して以降、基準中位所得を給与別選定基準に使用
- 通常、貧困率は中位所得の50%以下を意味。これに照らして給与別選定基準が低く定められている。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능력	의료급여	5,400	3,400	2,900
자가구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	4,200	3,500
근로무능	의료급여	8,500	6,500	6,000
력자가구	생계주거교육급여	10,000	7,300	6,600
부양의무자가구		22,800	13,600	10,150

- 서울 수도권 평균 전세가가 4억 3천만원인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에게 인정되는 기본재산액은 5,400만원에 불과.
- 기본재산액을 넘어가는 재산 가액에 대해서는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을 월 소득으로 환산(1,000만원의 금융재산이 초과하는 경우 626,000원을 월 소득으로 산정)
- 자동차의 경우 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

複雑でややこしい選定基準

地域		大都市	中小都市	農漁村
勤労能力者 世帯	医療給付	5,400	3,400	2,900
	生計住居教育給付	6,900	4,200	3,500
勤労能力の ない世帯	医療給与	8,500	6,500	6,000
	生計住居教育給付	10,000	7,300	6,600
扶養義務者世帯		22,800	13,600	10,150

- ソウル首都圏の平均チョンセ価格が4億3千万ウォンである状況で、基礎生活保障制度受給者に認められる基本財産額は5,400万ウォンに過ぎない。（チョンセ＝保証金を家主に預け月々の家賃は支払わない制度）
- 基本財産額を超える財産価額については、住居用財産1.04%、一般財産4.17%、金融財産6.26%を月所得に換算(1,000万ウォンの金融財産を超過する場合、626,000ウォンを月所得と算定)
- 自動車の場合、価額の100%を所得に換算。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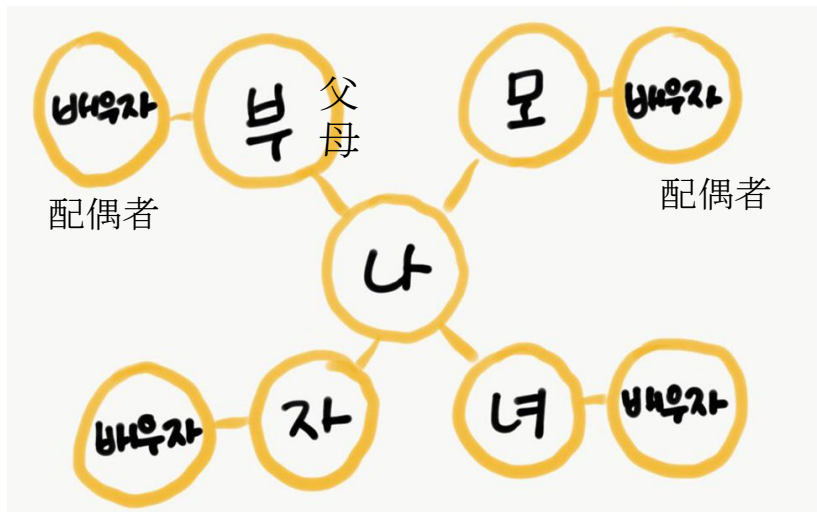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논리적 근거를 갖기보다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17%는 기본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2년 동안 소진한다는 논리로 설정됨.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6.26%는 재산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일반재산보다 1.5배 높게 설계됨. 더욱이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 100%로 당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함.
- 낮은 기본재산액과 과도한 소득환산율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건강이 더 나빠져 근로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집을 팔고 더 가난해질 때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음. 생활고를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 역시 많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진정 국민들의 최저한의 삶과 자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 있지도 않은 소득과 부양비를 간주하는 가짜소득은 없어야 함.

複雑でややこしい選定基準

- 財産の所得換算率は論理的根拠を持つより社会的合意に基づいている。
一般財産の所得換算率4.17%は基本財産を除いた残りの財産を均等に分けて2年間消尽するという論理に設定される。
金融財産の所得換算率6.26%は財産の流動性を勘案して一般財産より1.5倍高く設計された。
さらに自動車の場合、所得換算率100%で当時自動車を所有した人は受給できないという社会的認識に基づく。
- 「低い基本財産額と過度な所得換算率は貧困に直面した人々の健康が悪化し、労働能力を失うまで、住宅を売ってより貧しくなるまで、基礎生活保障制度に接近することを防いでいる。」生活苦を理由に極端な選択をする人も多い。
基礎生活保障制度が本当に国民の最低限の生活と自活を保障するためなら、ない所得と扶養費をみなす偽所得はなく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부양의무자기준 扶養義務者基準

- 부양의무자: 1촌 내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망한 1촌의 배우자는 제외)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의 단위는 '가구' 기 때문에 가구 내 모든 가구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함에 유의
- 扶養義務者: 1親等内の直系血族及び配偶者(死亡した1親等の配偶者を除く)
- 基礎生活保障制度保障の単位は「世帯」であるため、世帯内の全ての世帯員の扶養義務者に該当することに留意



1,842일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투쟁

- 2012년 8월21일부터 2017년 9월 5일까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지하보도 농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 2020년 8월까지 완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며 농성을 중단
- 부양의무자기준은 주거급여에서만 폐지 됨. 문재인정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을 남겨둔 채 공약을 파기하며 임기를 종료할 예정.



1842日の扶養義務者基準廃止闘争

- 2012年8月21日から2017年9月5日まで障害者と貧しい人々の「障害等級制扶養義務制の廃止光化門地下歩道座り込み」を通じて文在寅大統領が扶養義務者基準の廃止を公約、2020年8月までに完全廃止すると約束し座り込みを中断
- 扶養義務者基準は住居給与でのみ廃止される。
文在寅政府は生計給与と医療給与に扶養義務者基準を残したまま公約を破棄して任期を終了する予定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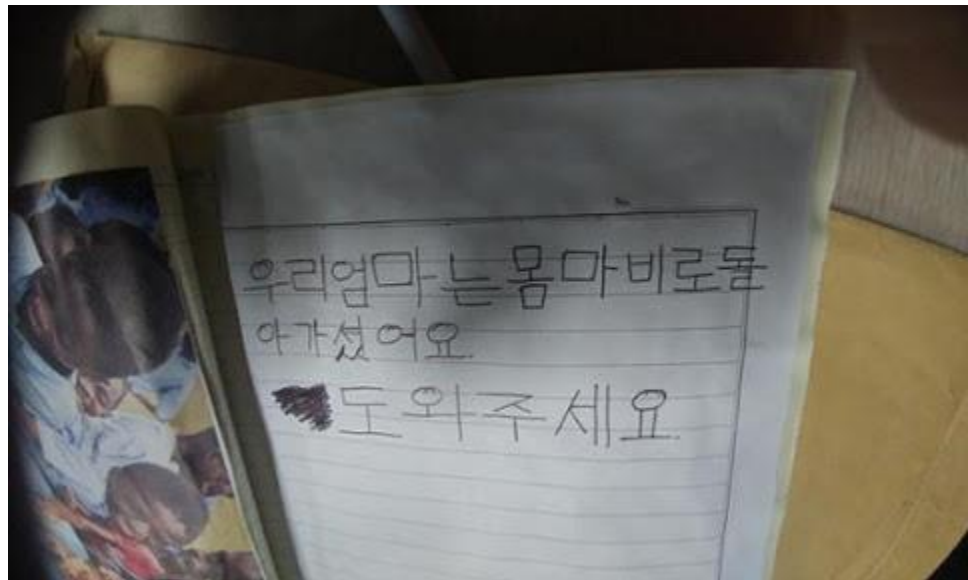


부양의무자기준, 반복되는 이웃의 죽음

- 서초구 방배동에서 숨진이 5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김씨의 시신이 발견됨. 지적장애가 있는 그의 아들은 어머니가 사망한 뒤 거리에서 노숙 중이었음

- 이들 모자는주거급여 수급자였지만 생계, 의료급여는 신청하지 않았음. 공공근로 종료 이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10년 전 뇌출혈 수술을 받은 김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상태로 병원을다니지 않았음

- 수급자수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약 140만명으로 여전히 인구의 3%에 불과함. '발굴'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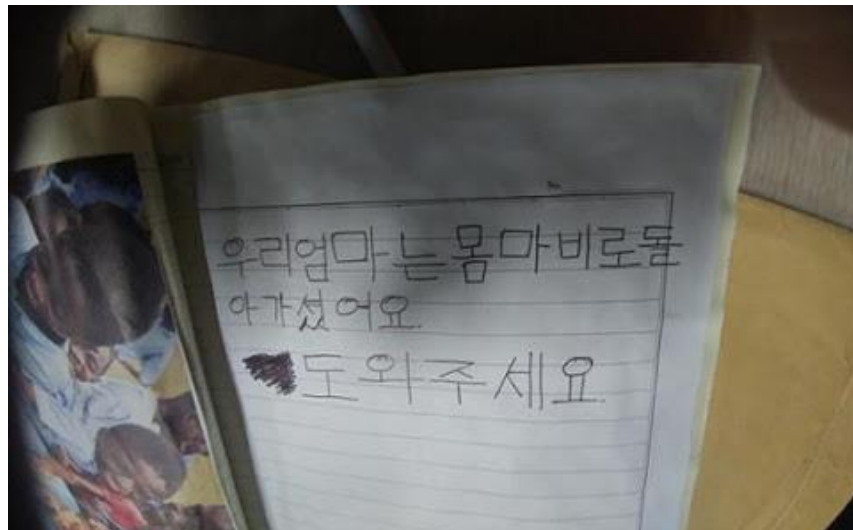


扶養義務者基準、繰り返される隣人の死

-
瑞草区方背洞（ソチヨグ・バンベドン）で死亡後5
ヵ月が過ぎたとみられる金氏の遺体が発見された。
知的障害のある息子は母親が死亡した後、ホーム
レスになっていた

-
これらの母子は住居給与受給者だったが、生計、
医療給与は申請しなかった。
公共労働終了後、何の所得もないことが確認でき
た。

10年前に脳出血手術を受けた金氏は、健康保険料
滞納状態で病院に通っていなかった。



낮은 급여수준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생계비에 식료품비는 37.1%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에 못 미치는 지출을 하는 가구가 30가구 중 13가구였음. 이 중 9가구는 주거비 과부담으로 인해 식비지출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식비를 아끼기 위해 무료급식, 저렴한 단체 제공식, 삼각김밥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수급자의 건강한 식생활, 의료이용 제약 등 삶의 질 하락으로 연결 됨. 대부분의 가구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음. 이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 악화와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됨.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2조에 최저생계비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의 급여 수준으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달성할 수 없음. 최저보장수준은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낮은 급여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의 타당성, 수급가구의 대부분이 1, 2인가구인 상황에서 가구균등화지수의 타당성에 대한 숙려와 더불어 중간 소득의 30%라는 낮은 급여수준을 타개할 방법이 긴급히 요청됨.

低い給与水準

- 「基礎法の立て直し共同行動」の調査によると、最低生計費に食料品費は37.1%と策定されているが、それに及ばない支出をする世帯が30世帯中13世帯だった。
このうち9世帯は住居費の過負担により食費支出が不足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食費を節約するため無料給食、安い団体提供食、おにぎりやコンビニ弁当で食事を解決するケースが多かった。これは受給者の健康な食生活、医療利用制約など生活の質の低下につながる。大半の世帯は支出を減らすために社会的関係を放棄し、孤立した生活を送っていた。これはうつ病など精神健康悪化と孤独死に対する恐怖につながる。
- 基礎生活保障制度は、法第2条に最低生計費を「健康で文化的な生活を維持するために必要な最小限の費用」と定義しているが、現在の給与水準では健康で文化的な生活を達成することはできない。
最低保障水準は「受給権者の世帯類型など生活実態、物価上昇率等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ているが、低い給与引き上げ率は物価上昇率に達していない。
基準中位所得算定方式の妥当性、受給世帯の大半が1、2人世帯である状況で、世帯均等化指数の妥当性に対する熟慮とともに、中間所得の30%という低い給与水準を打開する方法が緊急要請される。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

[2019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소득 중앙값과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					
(단위: 만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가구소득 중앙값(A)	254	413	526	636	737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B)	194	326	419	512	602
격차(A-B)	60 (31%)	87	107	124 (24%)	135
2019년 가구소득 중앙값의 30%(A')	76	124	158	191	221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B')	58	97	125	153	180
격차(A'-B')	18 (31%)	27	33	38 (24%)	41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가구소득 중앙값(A):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4인가구 가구소득 중앙값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 (1인가구 0.4, 2인가구 0.65, 3인가구 0.8272, 5인가구 1.1592)를 곱함					

-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최근 3년간 소득통계 자료의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하지만 실제 결정과정에서 예산에 맞춘 결정이 반복되며 실제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基準中位所得の問題点

[2019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소득 중앙값과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					
(단위: 만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가구소득 중앙값(A)	254	413	526	636	737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B)	194	326	419	512	602
격차(A-B)	60 (31%)	87	107	124 (24%)	135
2019년 가구소득 중앙값의 30%(A')	76	124	158	191	221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B')	58	97	125	153	180
격차(A'-B')	18 (31%)	27	33	38 (24%)	41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가구소득 중앙값(A):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4인가구 가구소득 중앙값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 (1인가구 0.4, 2인가구 0.65, 3인가구 0.8272, 5인가구 1.1592)를 곱함

- 基準中位所得の引上率は、この3年間の所得統計資料の引上率と物価上昇率などを考慮して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しかし、実際の決定過程で予算に合わせた決定が繰り返され、実際の世帯所得の中央値と大きな差を見せている。

【근로능력판정 흐름도】

의학적 평가		단계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점수 평가	전체 평가	60점 근로능력 있음 * 활동능력 평가 불필요	44점 근로능력 있음	60점 근로능력 있음	60점 근로능력 있음	* 활동능력 평가 불필요
				36점 근로능력 없음	36점 근로능력 없음	
간이 평가		간이평가 3개 항목(12점) 합계 3점 이하		근로능력 없음	* 활동능력 평가 불필요	

労働能力判定の流れ

医学的評価

段階外

1 段階

2단계

3단계

4단계

학능이평가

전체평가

간이평가

労働能力なし

* 활동능력 평가 불필요

60점

44점

36점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있음

간이평가 3개 항목(12점) 합계 3점 이하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 활동능력 평가 불필요

근로능력 있음

* 활동능력 평가 불필요

노동을 강제하는 근로능력평



최인기님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심장 대동맥류와 기형으로 인한 인공혈관 치환 수술을 받음.

중단된 생계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됨.

일반수급자격을 유지했으나 2013년 11월 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2014년 1월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음.

몸이 안 좋고 일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호소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음.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2014년 1월부터 교육훈련 받음.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급여를 빼앗긴다는 말에 2월 말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함.

일을 하며 감기증상과 발열, 부종이 지속되었음. 그러던 5월, 일하던 도중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

6월 다시 발작해 응급실에 입원. 이식 받은 혈관을 비롯해 복부 전체에 감염이 퍼져있음을 확인.

6월 입원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코마상태에 접어 듦. 8월 28일 사망.

労働を強制する勤労能力評価



チェ・インギさんは03年と05年の2回にわたって心臓大動脈瘤と奇形による人工血管の置換手術を受ける。

中断された生計と医療費による経済的困難により2005年基礎生活受給者となる。

一般受給資格を維持したが、13年11月、年金公団の労働能力評価により、14年1月、労働能力ありの判定を受けた。

体調が悪く、仕事をすれば健康が悪化することが懸念されるという点を洞住民センターの担当職員に訴えたが、「仕方がない」という返事だけが返ってきた。

地域の雇用センターで2014年1月から教育訓練を受ける。

仕事をしなければ全ての給与を奪われるという話に2月末日、アパート地下駐車場の清掃員として就職する。

仕事をしながら風邪の症状と発熱、むくみが続いた。

そんな5月、仕事の途中倒れて救急室に入院。

6月、再び発作を起こし応急室に入院。

移植を受けた血管をはじめ腹部全体に感染が広がっていることを確認。

6月の入院から1週間も経たないうちに、昏睡状態に入る。8月28日死亡。

< '17년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세부 현황 >

발굴차수	고 위험 대상자	복지서비스 지원내역					
		계 (지원율)	기초 생활보장	차상위	긴급 복지	기타 공공 서비스	민간서비스 연계
계	298,638	76,638 (25.6%)	6,712	8,537	1,109	31,412	28,868
'17년1차 ('17.2~'17.4)	58,436	20,327 (34.7%)	864	1,524	205	15,159	2,575
'17년2차 ('17.4~'17.6)	58,575	13,821 (23.6%)	1,136	2,819	141	5,315	4,410
'17년3차 ('17.7~'17.8)	58,214	11,367 (19.5%)	1,556	1,145	191	3,918	4,557
'17년4차 ('17.8~'17.11)	56,588	13,340 (23.6%)	925	1,679	265	3,542	6,929
'17년5차 ('17.11~'17.12)	66,825	17,783 (26.6%)	2,231	1,370	307	3,478	10,397

* (기타 공공서비스) 장애인 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보육, 요양간병 등

** (민간 서비스)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 송파 세 모녀 등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알려질 때 마다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이야기 하지만 현실은 발굴해도 연계할 사회안전망이 없음.
- ‘발굴’하지 못하거나 연계를 강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난에 처한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제도가 부족.

17年 福祉の死角地帯発掘 細部状況

발굴차수	고위험 예상 대상자	복지서비스 지원내역					
		계 (지원율)	기초 생활보장	차상위	긴급 복지	기타 공공 서비스*	민간서비스 연계**
계	298,638	76,638 (25.6%)	6,712	8,537	1,109	31,412	28,868
'17년1차 ('17.2~'17.4)	58,436	20,327 (34.7%)	864	1,524	205	15,159	2,575
'17년2차 ('17.4~'17.6)	58,575	13,821 (23.6%)	1,136	2,819	141	5,315	4,410
'17년3차 ('17.7~'17.8)	58,214	11,367 (19.5%)	1,556	1,145	191	3,918	4,557
'17년4차 ('17.8~'17.11)	56,588	13,340 (23.6%)	925	1,679	265	3,542	6,929
'17년5차 ('17.11~'17.12)	66,825	17,783 (26.6%)	2,231	1,370	307	3,478	10,397

* (기타 공공서비스) 장애인 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보육, 요양간면 등

** (민간 서비스)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 ソウル市松坡区での三人の母娘など貧しい人々の死が知られるたびに死角地帯を「発掘」として話しているが、現実には発掘しても連携できるセーフティネットがない。

- 「発掘」ができなかったり、連携を強制できなかったりするのではなく、貧しい人々の必要を満たす制度が不足。

· 주원인

自殺の主な原因

(단위: 명,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위	精神健康	정신건강	정신건강	정신건강	정신건강
	4,996 (36.1%)	4,715 (35.8%)	4,639 (35.8%)	4,555 (36.5%)	4,245 (36.3%)
2위	經濟問題	경제문제	경제문제	경제문제	경제문제
	2,678 (19.3%)	2,656 (20.2%)	2,418 (18.7%)	2,412 (19.3%)	2,340 (20.0%)
3위	身体健康	신체건강	신체건강	신체건강	신체건강
	2,394 (17.3%)	2,136 (16.2%)	2,382 (18.4%)	2,202 (17.7%)	2,045 (17.5%)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살의 주원인으로 경제적 문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소득분위별 자살사망발생률에서도 빈곤층의 자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2013年から2017年まで自殺の主な原因として経済的問題が高い割合を占めており、所得階層別自殺死亡発生率においても貧困層の自殺比率が最も高いことが分か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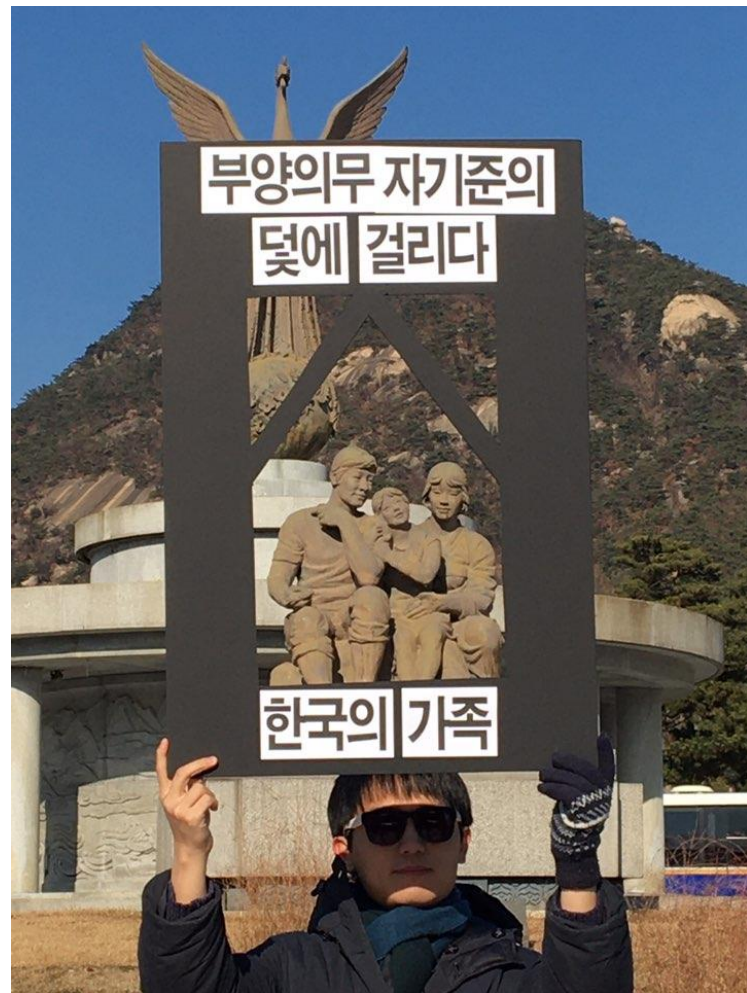
■ 건강보험분위 구간별 현황

健康保険分位別の現況

*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 건강보험료 1~20분위를 의료급여구간, 건강보험료 하위구간(1~6분위), 건강보험료 중위구간(7~13분위), 건강보험료 상위구간(14~20분위)으로 구분

(단위: 명, %, 구간별 인구 10만 명당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의료급여	자살사망자 수 (8.7%)	1,134 (8.4%)	1,067 (8.2%)	1,152 (9.0%)	1,125 (9.1%)	1,035 (8.9%)
	자살사망발생률	43.0명	43.0명	46.2명	44.0명	41.3명
하위구간	자살사망자 수 (26.0%)	3,585 (26.6%)	3,468 (26.7%)	3,234 (25.3%)	3,155 (25.6%)	2,999 (25.9%)
	자살사망발생률	33.8명	31.2명	29.4명	28.6명	27.0명
중위구간	자살사망자 수 (30.9%)	4,164 (30.9%)	4,046 (31.2%)	3,930 (30.7%)	3,782 (30.7%)	3,605 (31.2%)
	자살사망발생률	26.4명	25.6명	24.6명	23.7명	22.6명
상위구간	자살사망자 수 (34.3%)	4,576 (34.0%)	4,404 (33.9%)	4,489 (35.1%)	4,263 (34.6%)	3,934 (34.0%)
	자살사망발생률	20.6명	19.5명	19.7명	18.6명	17.0명



주거불평등과 쪽방지역, 용산정비창 개발 대응 활동

住居不平等とチョッ
パン地域(小部屋集合
住宅)、
ヨンサン車両整備場
開発への対応



용산 정비창

ヨンサン車両整備場

企業による国際業務地区でなく市民のための空間を

기업위한 국제업무지구 말고
시민위한 공간으로

용산정비창은

- 용산정비창은 서울 소재 용산역 뒤편 50만 제곱미터, 축구장 70개 크기의 대규모 공공부지로, 1905년부터 2011년까지 열차정비를 위해 쓰였던 공공부지로 10년 넘게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음.
- 10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정비창을 용산국제업무지구로 만들겠다고 삼성물산을 대표로 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만들었음. 최근 한국에서 크게 이슈되었던 대장동도시개발과 같은 공모형 민관합동 부동산 개발방식임. 당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사업비가 31조에 이르러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고 불렸지만 2013년 드림허브프로젝트가 부도선언을 하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기’라는 오명을 얻었음.
-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는 휘황찬란한 계획은 인근 땅값과 개발 욕망을 자극했고, 용산역 맞은편 한강로 3가에서는 세입자 대책을 요구하던 철거민 다섯명과 경찰 한명이 화마에 사망하는 ‘용산참사’가 발생. 빠른 이익을 위한 빠른 개발이 빠른철거, 극심한 폭력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었음.
- 2021년 재보궐선거로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 함.

ヨンサン車両整備場（跡地）

- ヨンサン整備場は、ソウルのヨンサン駅の裏側に50万平方メートル、サッカー場70カ所の大規模な公共敷地で、1905年から2011年まで列車整備のために使われた公共敷地で、10年以上も跡地として残っている。
- 10年前、呉世勳（オ・セフン）ソウル市長は、ヨンサン整備場をヨンサン国際業務地区にするとして、三星物産を代表とするドリームハブプロジェクト金融投資会社（PFV）を立ち上げた。最近、韓国で大きな話題となったソナム市のテジャン洞都市開発のような公募型官民合同不動産開発方式である。
当時、ヨンサン国際業務地区事業は事業費が31兆ウォンに達し「檀君以来最大の開発事業」と呼ばれたが、2013年にドリームハブプロジェクトが不渡り宣言をし「檀君以来最大の開発詐欺」という汚名を得た。
- **国際業務地区を作るという輝かしい計画は、近隣の地価と開発への欲望を刺激し、ヨンサン駅の向かい側の漢江路3街では、テナント対策を要求していた撤去民5人と警察1人が焼け死ぬ「龍山惨事」が発生。**
早い利益のための早い開発が早い撤去、激しい暴力をもたらした根本原因だった。
- 2021年の再・補欠選挙に戻ってきた呉世勳（オ・セフン）ソウル市長が、再びヨンサン整備場を国際業務地区に開発するという開発計画を発表した。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ヨンサン車両整備場開発の公共性強化のため

- 세계주거의 날을 앞 둔 2021년 10월 1일, 100%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는 대형 플래 카드를 펼치며 용산정비창 점거.
- 이후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를 구성하여 민간에 매각하여 소수의 이윤과 집값 상승, 주거불평등을 강화하는 개발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100% 등 모두를 위해 개발할 것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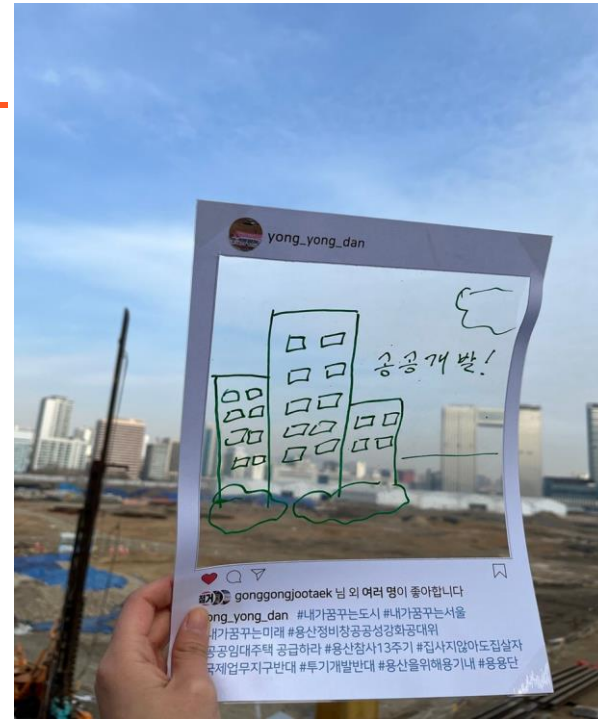


世界住居の日を控えた2021年10月1日、100%公共賃貸住宅の供給を要求する大型プラカードを掲げて龍山整備窓を占拠。その後、「ヨンサン(龍山)整備窓開発の公共性強化のための共同対策委員会」を構成して民間に売却し、少数の利潤と住宅価格の上昇、住居不平等を強化する開発ではなく、公共賃貸住宅100%など、すべてのために開発することを要求し、様々な活動を行っている。

용산정비창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과 선전전 コンサン車両整備場の共同対策委発足の記者会見と宣伝



용산 정비창 다크투어 ヨンサン車両整備場ダークツアー



- 기자회견과 선전전 외에도 용산역에서 시작해 용산정비창을 한바퀴 돌고 용산참사 현장에서 마무리 하며 공공역사를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의 문제, 용산참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민 참여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
- 記者会見と宣伝戦の他にも龍山駅を出発して車両整備場を一周、龍山惨事の現場まで回る。公共事業を民間が委託運営して発生する問題や龍山車両整備場での国際業務地区開発計画の問題点、龍山惨事について話し合う市民参加ツアープログラムを実施

쪽방지역 민간개발 = 주민 축출의 역사

- 쪽방은 열악한 주거이지만 보증금이 없고 월세/일세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거취약계층에게 최후의 보금자리로 작동하고 있음. 대부분의 쪽방지역이 노후화,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철거의 대상이 되어 왔음. 한국의 쪽방지역 개발은 쪽방 주민 축출의 역사였음.
- 2002년, 영등포구 내 쪽방 200여개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소멸, 2003년, 영등포구 내 2차 철거를 단행하여 총 280개 쪽방이 소멸, 2005년 6월 남대문로 5가동 400여개의 쪽방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면 철거, 2008년 용산구 소재 쪽방과 고시원 80여개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사라짐. 2015년 10월, 남대문로 5가동 쪽방지역 일부 철거로 약 100명이 쫓겨남.
- 쪽방지역에서는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건물주들이 법으로 보장된 보상을 주민들에게 하지 않기 위해 안전진단 등을 이유로 사전퇴거를 강행하기도 함.

チョッパン地域の民間開発=住民追放の歴史

部屋は劣悪な住居だが、保証金がなく、月ごとの家賃や日割り家賃で居住できるという点で、住居脆弱階層にとり最後の居住施設になってる。

ほとんどのチョッパン地域が老朽化、開発区域に指定されており、撤去の対象となっている。韓国のチョッパン地域開発はチョッパン住民追放の歴史であ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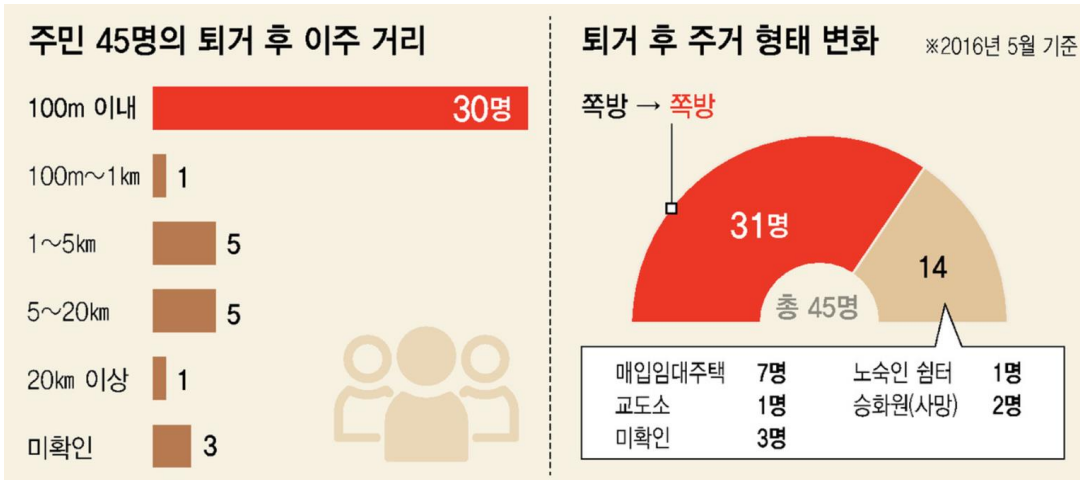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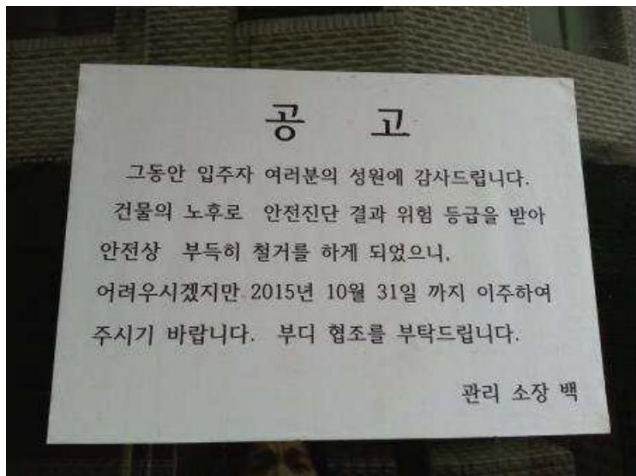
2002年、永登浦区内のチョッパン約200室が都市計画施設事業として消滅、2003年、永登浦区内で2次撤去が実施、計280のチョッパンが消滅、2005年6月南大門路5街洞で400余りのチョッパンが都市環境整備事業として全面撤去され、2008年には龍山区所在の小部屋と考試院(コシウォン)の80余りが都市環境整備事業によって消滅した。

2015年10月、南大門路五街洞の一部撤去により約100人が追い出される。

チョッパン地域では開発計画が確定する前に、建物主が法で保障された住民への補償を避けるため、建物の安全診断などを理由に計画確定まえに退去を強要するケースもある

쪽방지역 민간개발 = 주민 축출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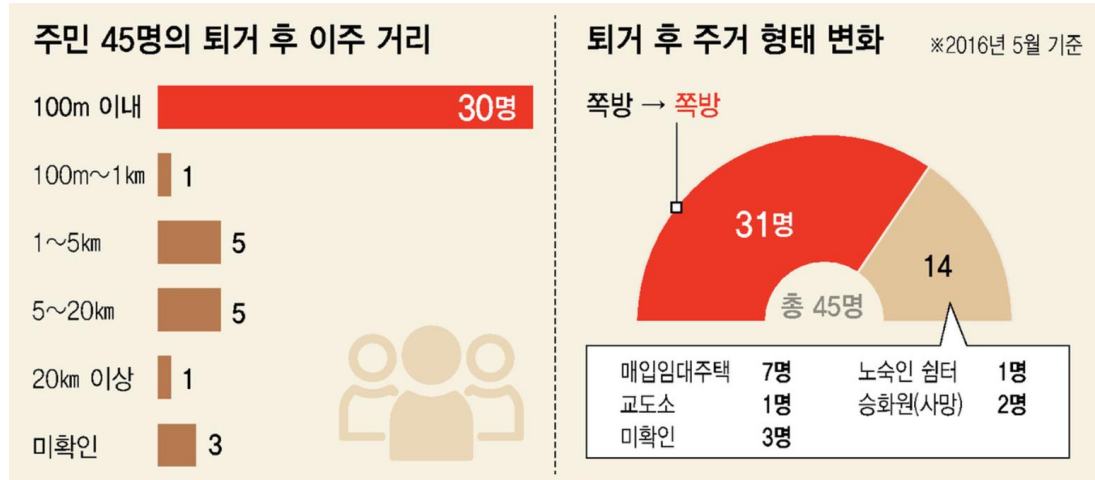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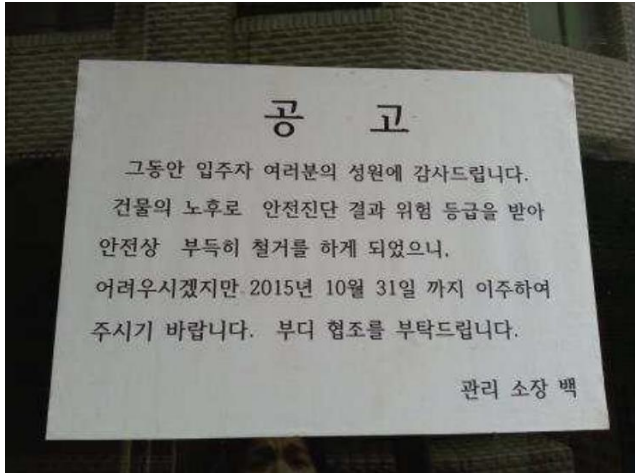
- 쪽방에서 퇴거당한 이들 중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소수이며 대부분 거리나 인근 쪽방으로 이동, 쪽방에서 퇴거당해 다른 쪽방으로 이사했으나 몇 년 뒤 다시 거주하는 쪽방 개발로 인해 퇴거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출처 : 한겨레신문

チョッパン地域の民間開発=住民追放の歴史

- チョッパン地域から追い出された彼らのうち、購入賃貸住宅などに移住するケースは少数で、大半がホームレスや近隣のチョッパンに移動するが、数年後に再び住んでいるチョッパン地域の開発によって退去を余儀なくされる状況も発生



출처 : 한겨레신문

쪽방지역 공공개발

- 2020년 1월 20일 서울 소재 영등포 쪽방지역에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 추진 계획이 발표됨. 기존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축출했던 민간개발 방식이 아니라 공공에서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쪽방촌을 선 이주 선 순환 공공개발 하겠다는 계획. 이어 부산과 대전 쪽방지역에서도 쪽방촌 주거환경정비계획이 발표됨.
- 동자동사랑방과 홈리스행동을 중심으로 서울 소재 동자동 쪽방지역에도 공공이 개입하여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공공개발 요구하며 주민 서명운동, 기자회견, 집회 등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21년 2월 5일 서울 소재 동자동 쪽방지역도 공공개발 계획이 발표됨.



チョッパン地域の公共開発

- 2020年1月20日、ソウル所在の永登浦のチョッパン地域に「永登浦公共住宅事業」推進計画が発表された。
従来の住民を無慈悲に追い出した民間開発方式ではなく、公共で事業施行の主体となり、チョッパン地域を先に移住させるで”先循環”公共開発という計画だ。
続いて釜山と大田の住宅街でも住居環境整備計画が発表された。
- 東子洞サランバンとホームレス行動を中心に、ソウル所在の東子洞(トンジャドン)の小部屋地域にも公共が介入し、住民の住居権保障案を含む公共開発を要求、住民署名運動、記者会見、集会などの活動を展開した結果、2021年2月5日、ソウル所在の東子洞の小部屋地域も公共開発計画が発表された。



쪽방지역 공공개발

- 하지만 해당 계획이 발표된 이후 건물주들의 반발로 작년 말 고시되었어야 할 지구지정 고시가 지역되고 있음.
- 조직된 주민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사회단체들이 함께 조속한 지구지정 고시를 촉구하는 직접행동을 전개하는 한편 개발관련 내용 등을 담은 쪽방신문 배포 등을 통해 주민 조직화를 계속 진행 중



チョッパン地域の公共開発

- 該当計画の発表以降、建物主の反発で昨年末に予定だった地区指定告示が地域化した
- 組織された住民を中心に労働組合、社会団体がともに早急な地区指定告示を促す直接行動を展開する一方、開発関連内容などを盛り込んだチラシ配布などを通じて住民組織化を継続して進めている。





賃貸住宅を拡大しろ!



주거권은 인권이다
쪽방주민 주거권을 보장하라

住居権は人権だ！
チョッパン住民の住居権を保障しろ

쪽방신문

<2021년 호외 2>

발행 : 2021 홈리스주간(신·속인안)공동발행, 동자동사랑방, 동자동주민협의회, 반곡시외연대,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용산시민공공취급처, 용산노년회, 서울노년복지센터, 재민연대, 용산노년연대, 서울복지지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반곡민복위원회, 홈리스행동)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5-4, 동자동사랑방 주민협동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83길 28-1, 홈리스행동
연락 : 070-8973-0613(동자동사랑방), 02-3789-0613(주민협동회), 02-2634-4331(홈리스행동)

쪽방 주민의 주거권을 걱정하는 월간 쪽지 신문

'개발 이윤'보다 '주거권'이 먼저!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2월 18일, 동자동 쪽방주민들이 새공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여해 피켓을 든 주민. 사진:홈리스주간

건물주들의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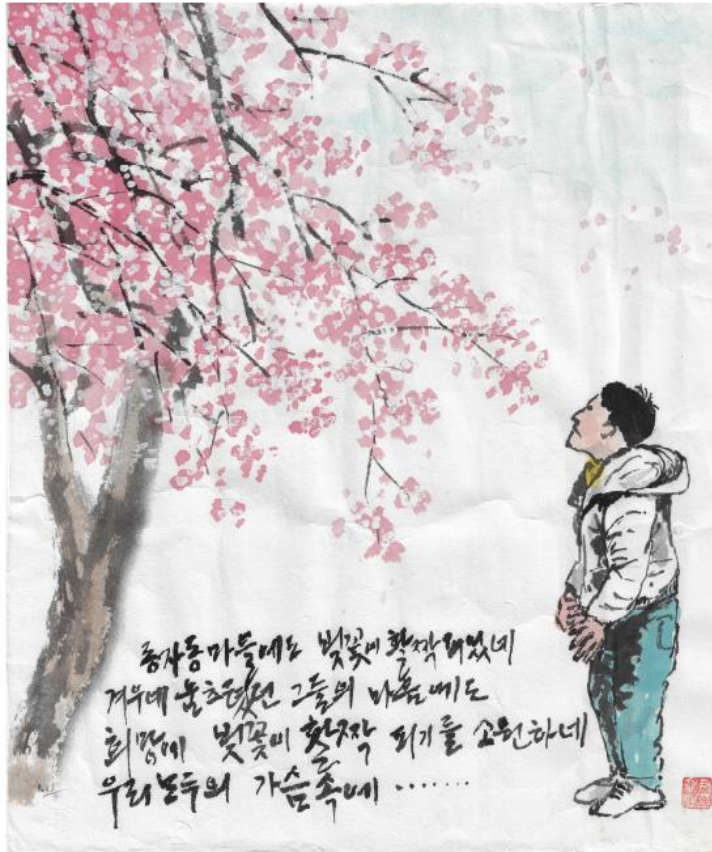
건물주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동네를 커다란 현수막으로 포장해 버렸습니다. 건물주들은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을 반대하며, "강제로 토지 뺏아가서 공공임대주택 짓고, 쪽방촌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며 유인물을 돌립니다. 그러나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건물·토지 소유자 중 사업지구 내 거주자에게는 공공분양 주택 또는 민간 분양주택의 우선 공급권이, 사업지구 외 거주자 중 무주택자에게는 공공분양주택의 특별 공급권이 부여됩니다. 현 거래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로 현금 보상으로 이뤄집니다.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공공주택사업으로서 건물·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이 이상 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자동 지역은 서울시가 2015년 5월,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존 5층 20m로 건축할 수 있던 것을 평균 12층, 최고 18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당시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2020년 5월을 기점으로 한 세부 정비계획을 조합 측이 제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작년에도 시 원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지금 건물주들은 민간개발을 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라고 할 땐 안 하고 지금 이러나요? 건물주들의 모임인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는 동자동 쪽방주민들에게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본인들을 조금만 이해하고 도와달라는 안내문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을 통해 '달걀 같은 쪽방'이 아닌 '화장실도 있고 개인 주방도 있는'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전에는 안 했나요? 민간개발이 그런 거라면 지금까지의 쪽방개발은 왜 주민들을 위한 집을 하나도 짓지 않고 모조리 내놨을까요? '달걀 같은 쪽방'에 살게 했으면서 왜 태워버릴 리스보다 비싼 평당 임대료를 받아갔나요?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짓는다

동자동에 임대주택이란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리려면 힘을 더 모아야 합니다. 동자동사랑방,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등 주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첫 활동으로 공공주택사업에 찬성한다는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도 제안 드립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주민 활동가, 홈리스주거팀 활동가들이 곧 방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 못 만나셨다면 동자동사랑방에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자동에도 공공주택사업이

2020년 1월 20일,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꼭 11년이 되던 날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영구임대주택 건설 뿐 아니라 개발하는 동안 주민들이 옮겨 살 선(先)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담겼습니다. 공사 기간 중 주민들이 흩어지지 않고 지내다 재정착하게 하려는 계획이 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전 쪽방, 부산 동구 쪽방이 같은 방식의 사업을 하도록 작년에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 2월 5일, 국토교통부는 드디어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용산구 동자동 쪽방도 앞서 발표한 지역과 같이 쪽방주민이 선(先)이주, 재정착하는 '공공주택사업'을 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동자동마을에는 빛깔이 화려했었네
겨우내 움츠렸던 그들의 마음에도
희망이 빛깔이 화려하게 되기를 소원하네
우리노동의 가슴속에서.....

글·그림 : 윤용주

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조직연대이사 / 동자동 주민

花を植え、幕で掃除をして村を守ってきた我々を尊重しろ

꽃 심고 비질하며 마을 지킨
주민을 존중하라

應當尊重種花掃地守衛村莊的居民

쪽방지역 공공개발

- 공공주택사업이 발표된 영등포, 대전, 부산, 동자동 외에도 서울 3곳, 부산 1곳, 대구, 인천에 쪽방지역이 있고 민간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언제 퇴거 당할지 모를 위기에 처해 있음.
- 동자동 맞은편에 위치한 양동 쪽방지역의 경우 민간개발이 진행될 상황에서 절반 넘는 주민이 사전퇴거 당함. 이후 홈리스행동에서 주민모임을 조직하여 공공주택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한 결과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방식의 변화를 만들어내진 못했으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민 주거권 보장 방안이 계획에 포함됨.
- 하지만 임대주택 평수가 14㎡(약 4.2평)로 타 임대주택보다 작고 호수가 부족하여 “집다운 집,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주거대책”을 요구하며 대응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음.



チョッパン地域の公共開発

- 公共住宅事業が発表された永登浦（ヨンドウンポ）、大田（テジョン）、釜山（プサン）、東慈洞（トンジャドン）の他にも、ソウル3カ所、釜山（プサン）1カ所、大邱（テグ）、仁川（インチョン）にチョッパン地域があり、民間開発区域に指定されているため、いつ退去させられるか分からない危機に瀕している。
- 東子洞の向かい側に位置する良洞（ヤンドン）のチョッパンの場合、民間開発が進められている状況で、半分以上の住民が事前に退去させられる。その後、ホームレス行動で住民の会を組織、公共住宅を要求する活動を展開した結果、公共住宅事業として開発方式の変化を生み出せなかったが、賃貸住宅供給による住民住居権保障案が計画に盛り込まれた。
- しかし賃貸住宅の坪数が14平方メートル（約4.2坪）で、他の賃貸住宅より小さく戸数が不足し、「家らしい家、誰も排除しない住居対策」を要求し、対応活動を続けている。





이해문수님! TUO K테이징
모주병존 별대지 의지공영
이재호님 두촌 천이 췌가주
충청권 문화관광@사리 (수요일) 행사



나는 가난 하...
차별과 멸시는 거부한다!

비고... 천제

인생...